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평화지대화 구상

홍순직 |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sjhongfree@naver.com)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Ⅰ)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s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I

강민조, 임용호, 강호제, 김종진, 유현아, 최용환 지음

경기북부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자연환경보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이중 삼중의 다양한 규제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이 지역은 북한과 접점을 마주하고 있어 군사시설 관련 규제와 개발 제약요인들로 인해 오랫동안 국토 이용 계획대상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산업·물류 인프라는 물론, 변변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활동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 재산권 행사, 삶의 질 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재정자립도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를 촉발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문헌 조사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 분석과 성과 평가, 규제 해소와 접경지역권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 및 평화·생태적 이용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로써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의 종합적 발전구상과 이의 추진 전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 들어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급전환되면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졌다. 관련 지자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관련한 각종 입안 발의와 다수의 세미나도 있었다. 사실 접경지역은 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협력의 장(場)을 제공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완충지대이자, 하나의 한반도(one-Korea)를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의 역할이 가능한 의미 있는 지역이다. 더욱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 정책인 DMZ 접경지역 평화벨트와 환황해 경제벨트 구상이 공유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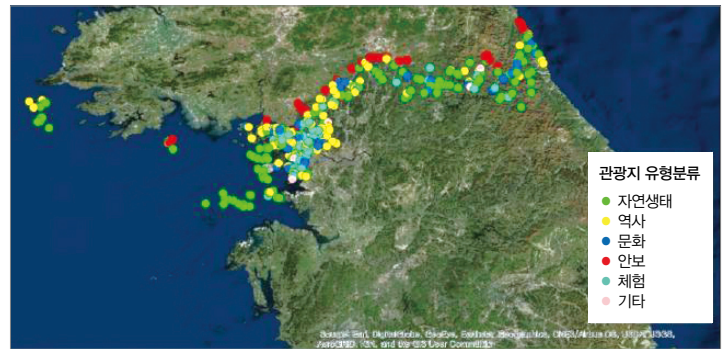
따라서 접경지역의 정체성 및 위상 정립과 함께,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국토균형개발과 평화지대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구상이 필요하다. 특히 접경지역이란 지역적 특수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낙후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구상, 그리고 이에 따르는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 충족과 접경지역의 역할 정립, 그리고 남북 상생의 종합 발전 방안 마련 등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첫째, 모든 연구의 시작은 상황 인식과 개념, 현황 파악인데,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여건을 아주 세밀히, 종합적으로 잘 분석하였다. 자연환경적 측면은 물론, 지역내총생산(GRDP)과 재정자립도, 지역발전지수, 산업단지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과 함께, 지역 내 주요 관련 지원법과 규제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꼼꼼히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큰 차별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의 문헌 조사와 자문회의, 전문가 및 지자체 실무자와의 면담, 현장조사는 물론,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기존 계획 및 추진 사업에 중앙부처, 경기도, 시군 지자체별 계획 및 사업뿐만 아니라 북측 수요와 계획도 반영하였다. 특히 연구책임자인 강민조 박사는 자신의 전문영역인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지구환경원격탐사(RS) 수행을 통한 위성영상의 입체적 공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정보 기반의 균형발전 모니터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는 객관적 데이터 활용과 사업 단계별 지역개발 사업

〈그림〉 접경지역의 생태·문화·관광자원 현황



연구 수행으로 학술적 측면은 물론, 정책보고서로도 매우 유용한 지침서로 평가된다. 한독 세미나를 통해 해외 접경지역·접경국가 간 협력 사례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더하였다.

셋째, 총 3차 연도에 걸쳐 수행되는데, 이번 1차 연도 목표 이상으로 큰 그림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1차연도 목표는 남북접경지역의 여건 분석과 균형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제시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2차 연도 목표인 구체적 실천사업 선정과 단계별 추진방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제시, 그리고 3차 연도 목표인 남북 간 상생발전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어, 후속 작업 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본문 중간 중간에 위성사진과 그림, 표 등으로 도식화·시각화하여 내용 정리와 논리 전개를 명쾌하게 진행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비록 지금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정체국면이라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소 약화되는 듯하지만, 접경지역이 남북한 협력의 통로이자 통합의 기지, 대륙과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그날을 위해 긍정의 마인드로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구상과 실천 방안 연구에 대한 이번 보고서와 국토연구원의 노력은 이러한 준비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